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도민 참여 중심 이어가

## 전남도, 장성서 두번째 도민공청회... 통합으로 달라지는 삶 등 설명

전남도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성군에서 두 번째 도민공청회를 개최,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 도민 참여 중심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군 도민공청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도민공청회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 사항, 통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삶 등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통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학생·학부모·교원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많은 도민이 통합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에 이어 장성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있다"며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군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균형발전형 행정통합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우승희 영암군수, 도민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은 심뇌혈관 질환 중심의 의료·바이오 산업, AI 데이터센터 기반 첨단 산업, 아열대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과 수출 전문단지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차분히 준비한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이러한 전략 산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장성이 전남 북부권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1일 목포와 신안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남은 20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통합에 관심 있

는 도민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누리(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은 향후 특별법 마련과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반영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 북구, 2026년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 24개월 이하 아동 동반 병원 방문 시 택시비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양육 가정의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와 병원 방문 시 5만 원 상당의 콜택시 바우처를 제공하는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빛고을 콜택시 전용 번호로 전화해 택시를 배차 받은 뒤 이용 요금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고향사랑기금 예산 4천만 원이 투입되며 총 8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예

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을 상시 모집한다.

자격 조건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교부한다. 바우처의 유효 기한은 6개월이며 병원 방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과(☎062-410-8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함께 병원에 방문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서구, 여성 1인 가구 '안전지킴이' 강화

#### 여성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위해 24시간 안전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여성 1인 가구 등의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CCTV·비상벨 설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주거안전 서비스다. 참여자는 ▲CCTV를 통한 현관 앞 실시간 영상 ▲비상 버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긴급 출동 요청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연계 ▲현관문 출입 내역 확인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구는 지난해 이용자 의견과 운영 성과를 반영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특

히 보다 선명한 영상 제공이 가능한 최신 장비로 개선하고 기존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해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기존 사용자 중 92명이 올해도 서비스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올해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성아동복지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vok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석우 기자

### 광주시, '여권 만들기 좋은 도시' 전국 2위

#### 전국 242개 대행기관 성과 평가... 외교부 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외교부의 '202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상위권 점수인 99.95점을 획득, 전국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2위(외교부장관 표창)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2개 대행기관(광역 14개, 기초 228개)을 대상으로 ▲업무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량 ▲교육 참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여권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

고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직원 수 대비 여권 발급량, 여권실무 연수교육 참여도가 높아 4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다만 오류 재발급이 1건 있어 업무정확도 항목에서 0.05점 감점받았다.

이번 평가점수는 96.79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3.16점 상승했다. 광주시는 직원들의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를 바탕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주력,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4000여 건의 높은 여권 발급 실적을 달성했다.

/전광훈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뭉치기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환율 문제, 원전 건설 계획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에는 신속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당국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조금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으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 1600원 정도 돼야 한다.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레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에 따라)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신규 건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마지막 전정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에는 발전이 안 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기저전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국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도 원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고 시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거치고 논쟁과 의

견 수렴을 통해 열어놓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을 두고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협박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이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 2026 나주 방문의 해

